

# 호황속의 양돈업

##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양돈연구회(회장 : 황금영)는 지난 7월 1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소재 축산 회관 지하회의실에서 「호황속의 양돈업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양돈현안 긴급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작년도의 극심한 양돈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양돈업계에 정부의 돼지고기 수입허용조치와 중금속 잔류부도 파문이 겹쳐 양돈농가들이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때 개최된 이번 대토론회에는 그만큼 관심도 컸다.

200여명의 양돈농가들이 자리를 꽉 메우고 예정시간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그만큼 열기가 높았고 진지했다.

공해문제, 인력·시설문제 등 9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들의 발표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편집자 주> ……◇

취재 : 김 동 성

### ◇공해문제 <발표자 : 홍문표(문성농원 대표)>

환경오염원의 1.6%를 점유한 축산폐수가 10~30배로 부풀려져 환경오염의 주범인양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심한 규제와 단속으로 양돈농가들은 폐업을 하거나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축산폐수는 산업폐기물이 아니라 옛부터 비료와 연료로 이용되어온 재생성 폐기물이다.

정부는 축산폐수를 규제하면서도 농립수산부내에 전담 과나 계, 또는 담당자를 한명도 두지 않고 있으며, 고작 오염실태 조사정도만 할뿐 연구나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표준활성오니법 등 시설비와 운전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방법만을 강요해

영세농가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축산폐수처리 방법을 적극 개발하고 처리기술개발에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겠다. 또한 퇴비를 발효, 건조,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비료로 인정해 주고, 처리시설자금을 충분히, 그리고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어야 한다.

### ◇인력·시설문제<발표자 : 윤희진(다비육종 대표)>

최근에 양돈장을 운영하면서 결정적으로 어려운 점을 들자면 ▲산업전망에 대한 불안 ▲폐수단속 ▲인력 확보 등 세가지를 꼽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력 확보가 어렵다.



양돈장의 인력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전반적인 농업부문의 사양화와 농업인구 감소 ▲양돈장 입지 및 근무조건에 상대적 불리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투자 소홀에 따른 인력공급측면의 제도적인 결함 ▲규모의 영세성 및 경영주의 인력관리능력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수입축산물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모든 1인당 관리두수를 25~20두에서 우선 50두로 높이고, 최종적으로는 100두를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농장규모가 300두 이하인 경우 주인이 직접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양돈장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새로운 집약관리방식의 돈사시스템 도입 ▲슬러리 상태의 액비처리방식 시도 ▲사료자동급이 ▲무간호분만 ▲환경관리가 용이하고 수가 필요없는 견고한 시설을 설치하고, 종업원의 인센티브제, 경영참여 시설자금지원 대책 확대, 자동화시설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사료문제<발표자: 이성균(함박산 농장 대표)>

비육돈 생산원가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0~70%로서 생산원가를 낮추는데 있어서 사료비는 절대적이다. 따라서 얼마나 질이 좋은 사료를 싼값에 구입하느냐 하는 것이 요체가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여건에 알맞는 사양표준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성분등록도 조단백, 조지방 등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사후관리에 문제가 많다.

또 양돈농가가 구입하는 사료에는 너무나 많은 부담금과 경비, 과도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즉 원료비와 제조비뿐 아니라 관측 및 A/S 비용, 영업사원의 인건비와 관리비, 중간 소매업자 마진 등의 영업비와 부가가치세, 운반비, 재세공과금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이 과중하게 부담하고 있는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수입곡물의 관세철폐 및 단미사료

의 부가세 면제 ▲국산옥수수 및 대두박의 국제시세차액 정부부담 ▲퀴터제 철폐 ▲배합사료의 부가세 철폐 등 정부의 정책전환과 함께, 자가배합 또는 공동배합사료 시설 설치, 원료 공동구입, 배합기술 제공, 금융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사양관리체계 문제<발표자: 안기홍(제일농장 과장)>

현재 국내의 돼지 사육형태는 ① 순종생산 ② F<sub>1</sub>생산 ③ 잡종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일형과 ④ 순종·F<sub>1</sub>생산 ⑤ 순종·잡종생산 ⑥ F<sub>1</sub>·잡종을 생산하는 복합형 등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비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 및 원가절감을 위해서는 시설·인력·기술(경험)에 따라 1개 형태로 단순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육 품종(특히 모돈)과 교배를 단순화해 품질 및 관리의 균일성을 높이고, 품질의 안전성과 기술지도, 정보입수를 위해 종돈은 전문종돈장과 계약해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밖에 성장단계에 맞는 사료급여체계를 정립하고, 종돈의 능력과 시설규모에 따라 사양시험을 해서 농장 고유의 사양프로그램을 개발, 성별·계절별로 차등적용해 육질향상과 사료비를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요일별로 작업을 표준화하고 발정동기화, 자동화 및 성력화 시행, 기록의 전산화 등 과학적 관리를 통해 품질을 관리해야겠다.

### ◇원가와 생산성<발표자: 정영철(유전자원 전문)>

현재 모돈 100두인 우리나라의 전업규모의 비육돈 kg당 생산원가는 ▲사료비 780원(71%) ▲인건비 100원(9%) ▲사육경비 130원(12%) ▲감가상각비 60원(5%) ▲판매비·기타 30원(3%)으로 1,100원에 달한다. 이들 항목의 총원가중 고정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사료비 120원(10.9%) ▲인건비 100원(9%) ▲사육경비 105원(9.5%) ▲감가상각비 60원(5.5%)으로 모두 385원(35%)이다.

따라서 모돈회전을 2.2회전, 포유개시 산자수 10두, 출하육성률 90%, 농장 총사료요구율 3.4, 출하일령(100kg 기준) 183일을 생산기술지표로 삼았을 때 생산기술 수준향상에 따른 원가절감액은 ▲모돈회전을 0.1 개선시(2.2→2.3) 16원(1.5%), ▲산자수 1두 개선시(10→11두) 35원(3%) ▲육성률 5% 개선시(90%→95%) 20원(1.8%) ▲사료요구율 0.1 개선시(3.4→3.3) 21원(2%) ▲출하일령 10일단축시(183일→173일) 21원(2%) 등 총 113원(10.3%)에 달한다.

따라서 우리가 수입축산물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선 수입유예기간중에 빨리 생산기술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함께 정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양돈농가의 생산비를 낮춰 주어야 한다.

### ◇종돈개량문제<발표자: 이원(종축개량협회 부장)>

'89년말 현재 종돈업 등록업체수는 155개로 이중 1개 품종당 20두 이상 보유업체가 102개소, 4개 품종(W.L.D.H) 100두이상 보유업체가 53개소이다.

현재 민간부분의 종돈개량조직은 한국종축개량협회에 검정사업을 수행하는 등 2원화되어 있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종돈개량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종돈업 등록업체 심사기준을 재조정, 엄격히 심사하여 원종돈업체와 증식돈군업체로 분리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원종돈은 암수 공히 검정돈군에 최종 선발된 종돈으로 대체토록 제도화하고 위생등급에 의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양돈산업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고원화된 종돈개량단체와 생산자단체를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종돈개량단체에서는 등록·검정·심사·기술지도·교육을 담당하고, 생산자단체에서는 정책·기획·조사·통계

분석·대책을 마련하여 정부와 협의 시행하는 기능분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축산진흥대회에서 양돈부문을 분리, 공진회로 개편하여 민간 주도로 관련산업전체를 참가시켜 격년 또는 4년 주기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유통문제<발표자: 윤덕영(덕영종돈장 대표)>

양돈농가가 돼지를 도매시장(서울)에 출하할 때 부담하는 경비(14만원짜리 1두 기준)는 민간도매시장의 경우 판매수수료 4,200원(3%), 검사수수료 110원, 도축세 1,100원, 운반비 1,600~2,000원, 위탁비 1,000원, 페인트대 100원, 기타경비 1,000원 등 총 9,110~9,510원으로 축협공판장의 판매수수료 3,500원(2.5%), 검사수수료 110원, 도축세 1,100원, 운반비 1,600~2,000원 등 6,310~6,710원에 비해 2,800원이나 많다. 즉 양돈농가들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수취가격은 13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양돈농가들이 돼지를 판매할 때 수취가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배정출하 ▲협회 및 축협의 운송일원화 ▲판매수수료 및 도축세 인하 ▲중간상인(위탁상) 배제 ▲중간도매시장의 축소 ▲발골작업의 일원화(직업양성소 개설) 위생적인 운송업체 보호육성 ▲도부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밖에 정부는 축산물을 물가주범으로 지목하면서도 연동고시가격 단속을 게을리 하는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세제문제<발표자: 박내춘(열림축산 대표)>

현재 사료대금에 부가하여 납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재화의 유통측면에서 볼 때 축산물은 부가세의 근본성격인 「전가」가 불가능하고, 축산물의 가격

형성은 수요·공급의 원칙이 거의 완벽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축산업자는 축산물이라는 하나의 중간생산물을 생산하는 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소비자처럼 그저 부담만 할뿐 「전가」가 불가능한 것이 현제도의 모순이다.

예를 들어 모돈 100두 규모의 경우 농장설립을 위한 투자액이 3억원이면 그중에 부가세 부담액이 2,700만원이고, 모돈 100두 유지를 위한 연간 부가세 부담액은 1,500만원이나 된다. 또 유사 타업종과의 형평문제를 보더라도 수산업인 원양어업은 외화획득의 경우 부가세법 11조에 의해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연근해업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주비용인 유류비에 포함된 부가세를 면제받고 있다.

그밖에 소득세 부과에 주요기준이 되는 표준율은 양돈업의 특성인 Pig Cycle을 감안해서 정해져야 한다.

### ◇양돈산업정책 문제<발표자: 한백용(코포렉스 사장)>

고도의 상업사회로 성장·발전하는 과정에서 축산업(양돈업)은 상공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여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중소기업지원 관련법은 중소기업진흥법 등 14가지인데 반해 축산업지원 관련법은 축산법 등 10가지에 불과하다. 또 돈육수출 지원정책을 비교해 봐도 대만과 덴마크는 수출보조금 지원(정육 kg당 230원, 297원), 도축세 면제, 사료부가세 면제, 사료수입관세 면제, 돈육수출 금융지원, 시장개발비를 지원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돈육수출금융만 지원할 뿐이다.

축산물의 전면 수입개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수출주도적 공업지원정책에 소외되었던 보상적 차원에서라도 정부는 강력한 지원을 통해 축산업을 경쟁상대국 수준으로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돈가안정대책으로 ▲모돈증식 및 출하체중상향조정 ▲계열화 모돈사육시설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